



# 한국의 주요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원자력(Ⅱ)

1990~2002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환경정책



\* 지난호에 이어집니다.

## 한겨레

• 1990년 •

1990년에는 8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다. 그 중 6개는 북한핵과 관련하여 한국에 핵무기를 설치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미국의 남한 핵철수를 주장한다(2월 27일, 6월 26일).

2개의 사설은 미국과 소련의 정

상 회담과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나타난 각국의 외교적 줄다리기를 그만두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4월 10일, 12월 20일).

또한 북한의 국방비에 1.7배에 달하는 남한 국방비가 건전한 경제 성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남북한 군사 회담 추진을 제안하며(3월 6일)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군비 통제안에 핵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9월 7일).

나머지 2개의 사설은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간의 폭력 사태를 다루고 있다. 정부의 밀실 행정과 여론 수렴 과정의 배제를 안면도 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핵폐기물 안전 관리와 처리 기술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11월 9일, 11월 10일).

• 1991년 •

1991년에는 37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다. 그 중 29개의 사설이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한반도 핵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논평하고 있으며 2개는 탈냉전 시대의 핵감축을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해서 논평하고 있다. 그 밖에 원전의 안전성(2개), 핵폐기물 처리(2개), 에너지 정책(1개)을 지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는 환경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를 거듭 주장하며(3월 9일) 미국이 한반도를 본분 지역으로 분류하고 핵무기까지 동원한 미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4월 16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4월 13일) 군사적인 긴장을 초래하는 외교 발언을 자제하고(4월 14일) 남북한이

핵무기를 동시에 사찰하여(5월 24일) 자주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4월 18일). 북한이 '핵 안전 협정 체결'의 의사를 밝히고 가서명함으로써(5월 31일, 6월 11일, 6월 13일) 한반도의 핵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단계적인 미국의 전술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7월 12일, 7월 18일).

또한 사설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7월 4일) 「비핵보유국의 핵보유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8월 1일, 8월 9일).

한겨레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 협정에 서명을 미뤄온 이유를 주한 미국의 한반도 핵배치에서 오는 위협이라고 지적하며(9월 15일) 미국이 남한에 있는 핵무기 중 공중 발사 전술 핵무기를 당분간 철수하지 않겠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를 통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미국이 패권주의적 세계 전략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10월 15일, 10월 23일, 11월 3일).

한반도의 핵무기 철수를 포함한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 감축 계획 발표가 세계 평화 정착과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9월 29일, 10월 8일) 노

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에 이은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11월 9일).

사설은 핵시범 사찰에 대한 동시 시행 문제를 남북한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세로 해결하기를 제안하고 있다(11월 14일, 11월 19일, 11월 23일, 11월 24일, 12월 7일, 12월 10일, 12월 13일).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핵부재 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2월 20일, 12월 26일, 12월 29일).

원전의 안전성과 정책에 관하여 3개의 사설이 나온다. 원전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원전 과신의 에너지 대책'은 핵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7월 9일) 원전 추가 건설에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월 26일).

또한 영광 원전 주변 주민 역할 조사 결과 원전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아무런 상관 관계 없다는 결과는 성급한 결론이며 조사 비용을 한전이 지원했기 때문에 조사의 독립성이 의심스러운 편파적인 조사라고

비판하고 있다(6월 23일).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설은 2개이다. 11월 5일자 사설은 정부가 핵폐기물 정체를 좀더 신중해야 하며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건설의 기술 검토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가 1968년부터 1972년까지 5년 동안 비공개리에 핵폐기물을 동해안 울릉도 앞바다에 버렸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편의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핵정책에 강한 불신과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12월 15일).

1개의 사설은 제 19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정부의 미온적인 환경 정책과 환경 오염에 대한 기업의 부도덕성을 언급하면서 핵무기와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반핵을 주장하고 있다(6월 5일).

• 1992년 •

1992년에는 32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다. 26개의 사설은 북핵 관련 사설이고 2개는 핵폐기물 처분장에 관한 사설이며 원자력에너지와 일본핵에 대해서는 각각 1개와 3개씩 다루고 있다. 남북한의 핵문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 채택하고 남한에서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발표와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 비준하고 핵사찰을 받겠다는 발언은 남북 관계에 있어 가시적인 진전이며 남북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쌓는 값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월 9일).

사설은 비핵화 검증 장치인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미확인된 불신을 해소하자고 제안한다(1월 4일, 1월 31일, 2월 18일, 2월 21일, 5월 5일). 미국도 뉴욕에서 북한과 정부간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사설은 북-미간 외교채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1월 25일) 미국은 이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비핵국가의 핵개발 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망한다(1월 8일, 1월 22일).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남북한 사이의 경제 협력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를 미국 중심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의 남북 관계에서 미국 중심의 힘과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계산이다. 사설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남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며(2월 26일, 6월 14일) 북핵 문제를 남북 교류 협력과 연계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3월 1일).

미국은 한반도를 분쟁 예상 지역으로 분류하고(3월 8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을 비준하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협박권'에서 벗어나게 된다(3월 11일).

사설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

이 북한과 미국간의 정상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고 일본과의 수교 협상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4월 12일, 4월 19일).

남한과 북한은 계속되는 고위급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다. 사설은 미국의 의도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6월 6일) 남한 운신의 폭이 좁다며 북한과 남한의 자주적 민족 대화합을 바탕으로 교착상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5월 29일).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의 교환 사업이 위기에 봉착한다. 사설은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핵연계 방침을 고수하는 현정부와(7월 17일, 7월 23일, 7월 28일) 미국의 계속된 강공 일변도의 대북 핵공세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6월 24일) 미국이 더 이상 '확인도 부인도 없는 핵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핵부재 선언을 분명하게 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핵협상을 열어갈 것을 제안한다(7월 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관계의 외형적인 호전과 달리 남북한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핵문제' 때문이라며(9월 5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서 특별한 혐의 발견되지 않은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 교류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9월 19일). 또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9월 30일).

일본은 핵 재처리 시설의 확충과 상업화를 통해 독자적인 플루토늄 확보 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3개의 사설은 핵재처리 시설과 플루토늄 확보에 집착하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고(7월 22일) 일본의 플루토늄 해상 수송이 기술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플루토늄 수송 항로를 밝히기를 일본에 촉구하고 있다(10월 7일, 11월 8일).

2개의 사설은 핵폐기물 처분장에 관련된 사설로서 핵쓰레기 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정부의 밀실 행정과 단편적인 대응이 지역 주민의 항의 시위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1월 4일) 정부의 핵쓰레기 처분장 선정에 관한 정책의 무책임성과 무계획성, 전근대적인 행정이 결국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5월 22일).

1개의 사설은 전력 관련 사설로써 여름철 전력난을 강조하면서 환경 보호의 주장이 점점 드세지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석유 중심의 전력 생산하에서 습관적인 낭비를 줄이고 절약을 당부하고 있다(6월 7일).

• 1993년 •

1993년에는 47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37개가 북핵 관련 사설이고 나머지 2개는 세계의 핵 군축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의 원전 사고(1개)와 핵폐기물과 관련된 사설(3개), 그리고 핵보유국의 핵실험과 관련된 2개의 사설이 나오며 일본의 플루토늄 수입과 관련하여 1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1개의 사설이 나온다. 한겨레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이 북한에 대해 지나친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북한핵이 국제 문제화되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민족 문제 해결을 정부에 일관되게 제안한다(2월 13일).

미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전략 핵 무기를 대폭 줄이기를 합의한 제 2 단계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을 맺는다. 사설은 이것이 비핵국가들의 핵 무기 개발을 막고 세계의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월 5일, 1월 14일).

일본의 플루토늄 반입은 일본의 핵무장이 의심스러운 만큼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월 6일).

북한은 갑작스럽게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한다. 남북 합의 사항의 신뢰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사설은 실망과 함께 핵문제가 안보 리로 넘어가는 것 보다 중국·러시아의 협조하에(10월 28일) 자주적

인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월 4일, 3월 15일, 3월 18일).

한겨레의 바람과는 달리 북핵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넘어간다(4월 3일, 5월 14일, 6월 15일).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핵확산 금지 조약 체계를 지키려는 미국의 강경한 세계 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며(5월 1일, 5월 3일) 정부의 자주적인 대응을 거듭 제안한다(4월 24일). 사설은 한반도가 강대국에 의한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에서 북한과 미국은 회담을 갖는다. 사설은 북한과 미국의 뉴욕 회담의 성격을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하여서 북한을 국제 감시속에 가둬 놓으려는 전략이고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미국 핵우산 제거=핵무기 개발 포기'의 등식을 성립시키려는 것으로 파악한다(6월 1일, 6월 6일, 6월 12일).

북한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 접촉이나 정상 회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7월 7일). 북한은 제네바 회담을 통해 미국에게 경수로 건설을 지원받고 핵무기 포기, 핵확산금지조약의 완전 복귀를 약속한다(7월 11일, 7월 16일).

사설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남북 관

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대북 경수로 건설을 남북한의 협력의 시초로 삼아 비무장 지대에 발전소 터를 잡고 남북한이 상업용 핵개발을 협력하여 장기적인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를 꾸준히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7월 21일, 8월 3일, 8월 21일, 9월 3일).

남북한의 긴장 무드가 사라지면 한반도의 통일을 언급하는 한겨레의 이상적인 바람과 달리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접촉만을 요구한다. 사설은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통해 핵투명성을 국제 사회에 인정받고 남북 특사 교환에 합의하여 경제 협력을 가시화 하고(12월 28일) 미국과 수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북한이 온건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월 5일, 11월 3일).

제네바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요구들이 한꺼번에 매듭지어 버리는 일괄 타결을 주장한다(10월 23일, 10월 27일, 11월 5일, 11월 14일, 11월 25일, 12월 5일, 12월 10일).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 공격을 계획하고 북한은 전군에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여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다.

핵발전 시설의 공격은 핵폭탄 투하의 파괴력을 갖고 있기에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11월 9일) 북핵 문제가 민족의 사활과 장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내 정치 상황이나 정치적 인기를 배제하고 법적 절차와 즉각적인 실행 등을 감안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고 제안한다(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23일, 12월 25일).

1개의 사설은 북핵 문제가 한참 고조되어 있는 만큼 한-중 수교의 의미를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이 북핵 문제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11월 21일).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서 심각한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며 러시아가 체제 개혁과 사회적 격동에 휩싸여 핵무기와 핵시설, 핵폐기물 등이 전반적으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4월 9일) 러시아의 동해안 핵쓰레기 투기에 관한 2개의 사설은 동해의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책임 규명 촉구와 핵폐기물 처리에 따른 러시아의 재정 지원 요청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10월 20일, 10월 23일).

정부가 지역 주민들을 금품으로 회유하며 은밀하게 핵쓰레기터 유치 서명 작업을 벌인 사실을 두고 주민간의 불신을 낳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1월 21) 용인에 비밀리에 세우려 했던 석유 비축 기지 사건을 두고 1990년의 안면도 사태처럼 정부가 혐오 시설의 건립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2월 25일).

미국과 중국의 핵문제를 두고 사설은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핵확산 금지 체계를 지키려는 미국의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5월 3일) 중국의 핵실험이 핵개발을 자제해온 나라들에게 핵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구실을 줄 염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10월 11일).

• 1994년 •

1994년은 원자력 관련 사설이 61개 나왔는데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해였던 만큼 56개가 북핵 관련 사설이며 3개의 사설은 핵폐기물 관련 내용이고, 1개는 환경 관련 사설이다. 나머지 하나는 원전 뇌물 관련 사설이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 북한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1월 4일) 미국과의 북-미 회담을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약속받으려 하고, 미국은 북핵의 투명성을 높여 세계의 핵무기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2

월 13일, 5월 11일, 5월 22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입회없이 핵연료봉을 교체하며 주변국과 외교적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사설은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탓으로 지적하고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여 자국의 첨단 공격용 무기를 구매하도록 한국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월 30일, 2월 5일, 3월 28일).

또한 북핵 문제는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질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의해 민족적 주체 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1월 1일, 1월 12일, 2월 2일, 2월 19일, 2월 28일, 3월 19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북한이 수락하지만(2월 17일) 핵사찰 내용과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남북간의 '특사 교환' 논의는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유엔 안보리로 북한의 핵문제는 넘어간다(3월 5일, 3월 15일, 4월 2일, 4월 9일).

사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자,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확고한 철학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3월 24일)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투명성을 확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3월 29일).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비핵화 공동 선언을 재검토하는 발언에 대해 사설은 우리 정부가 핵재처리 시설을 가질 명분을 찾는 의도가 아니길 희망하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낸다(5월 25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 연료봉 교체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입회를 요청하며(4월 24일, 5월 17일) 한반도의 긴장은 다소 완화되지만 쉽게 북-미간의 회담은 타결되지 않고(5월 30일) 북한은 NPT 탈퇴까지 언급하는 등 북핵 핵연료봉의 연소 과정을 계측하기 어렵게 되자(6월 3일, 6월 4일) 국제적 대북 제재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추측과 북한의 지나친 핵카드 집념과 미국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외교 정책을 동시에 비난하며(6월 8일, 6월 12일, 6월 10일, 6월 13일, 6월 15일) 동시에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하고 있다(6월 18일, 6월 22일).

1994년도에 망명한 강성산 북한 총리의 사위 강명도씨의 신빙성 없는 '북한 핵폭탄 5개 보유' 발언을 주요 일간지들이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1면 머릿기사로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한다(7월 29일). 정부의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북한 핵폭탄 5개' 발언은 나라 안팎에 미칠 파장과 후유증을 감안하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월 30일).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합의한다(6월 25일, 7월 6일, 7월 9일, 7월 24일, 7월 29일, 8월 6일).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약속한다.

사설은 대북 경수로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수로 관련 문제들을 북한의 과거핵과 결부시키지 말고 대국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공조 체제 아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월 25일, 8월 10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7일, 8월 24일, 8월 26일, 8월 31일, 9월 2일, 9월 9일, 9월 18일, 10월 15일).

특히 사설은 경수로 지원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과 부담 비율 등에 관한 관련국간의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가 건설 비용을 적지 않게 지원하더라도 민족 화해의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국민적 합의하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25일, 10월 20일). 동시에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역사의 긍정적인 진진으로 평가한다(12월 11일).

핵폐기물에 관련된 3개의 사설은 고리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핵폐기장 저장고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5월 14일, 6월 1일)

와 핵폐기물 처리장터로 '굴업도'를 선정한 것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보도하면서(12월 23일) 주민 투표 방법과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1개의 사설은 한반도의 심각한 환경 오염 실태를 설명하며 핵확산 추이에 따른 환경 파괴와 생존 위협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4월 26일).

나머지 하나의 사설은 전 한전 사장 안병화씨의 원전 뇌물 사건을 보도하면서 원전 건설 비용이 정치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8월 9일).

• 1995년 •

1995년에는 30개의 핵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북핵 관련 사설은 18개이고 폐기물 관련 사설은 3개, 원전 사고는 2개 원전 건설 관련 사설은 1개, 세계 핵문제와 핵실험은 5개, 핵융합에 관한 사설도 1개 등장한다.

대부분의 북핵 관련 사설들은 '한국 표준형 경수로'를 거부하는 북한과 이를 고수하는 한국 정부와의 마찰과 KEDO 출범의 난항을 다루며 경수로 협상의 성공과 경수로 지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연한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월 13일, 3월 11일, 3월 30일, 4월 16일, 10월 22일).



북한은 미국의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면 '한국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3월 21일) 한국형이라는 경수로 명칭 대신 미국 컨버스턴 엔지니어링사의 CE-80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4월 1일).

사설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을 나타내는 한편 북한이 계속적으로 대화의 용이가 있기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 경수로 문제, 북-미 관계 개선 등의 문제가 모두 풀려 민족적 화해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4월 23일, 4월 28일, 5월 3일, 5월 12일).

팔라룸푸르 회담의 경수로 협상에서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기로 한 것에 대해 사설은 남북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 완화와 평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제네바 기본 합의문의 경수로 협상에 따른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에 대한 경제 규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규정은 이제 북한이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 개방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6월 3일, 6월 9일, 6월 14일, 6월 14일, 12월 14일).

1개의 사설은 1994년 여름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몰고 왔을 때 미국이 전술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했다는 미국의 발상을 비난하고 있으며 정부는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미국에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핵무기 제조와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월 15일).

핵폐기물 처분장과 관련된 '굴업도 사태'를 다룬 3개의 사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선정 없이 핵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력이 유일한 에너지 대책이라는 정부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1월 23일, 2월 18일, 10월 9일).

원전 사고와 원전의 건설에 관해서 3개의 사설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고리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와 영광원전 4호기의 사고는 방사능 다량 유출 가능성이 있는만큼 사고의 심각성이 크며 전반적인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7월 23일, 10월 1일). 또한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환경 대책도 없이 가장 여건이 나쁜 영광에 원전 건설을 착수하여 6기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12월 19일).

1개는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사설로서 핵융합 발전의 친환경성과 선진국들의 빠른 연구 움직임을

소개하며 핵융합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7월 25일).

1995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 2개의 사설은 NPT 체제의 비판이 거센만큼 핵보유국의 비핵화 노력이 회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4월 18일, 5월 13일).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을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프랑스는 핵실험 실시를 발표한다. 2개의 사설은 핵보유국들의 횡포는 비보유국들에 대한 핵 억제 논리를 무색케 한다며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월 15일, 9월 7일).

또한 중국은 전세계의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중국의 두 번째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다. 내년 예정된 강대국들의 포괄핵실험금지협정이 차질없이 체결되도록 기존 핵보유국의 적극적인 핵확산금지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8월 19일).

• 1996년 •

1996년에는 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다른 해와 달리 핵 관련 사설은 하나도 없다. 프랑스 핵실험과 핵실험금지협정(CTBT)에 관한 2개의 사설과 원전 사고와 원전 건설에 관한 사설 2개, 그리고 1개는 원자력 에너지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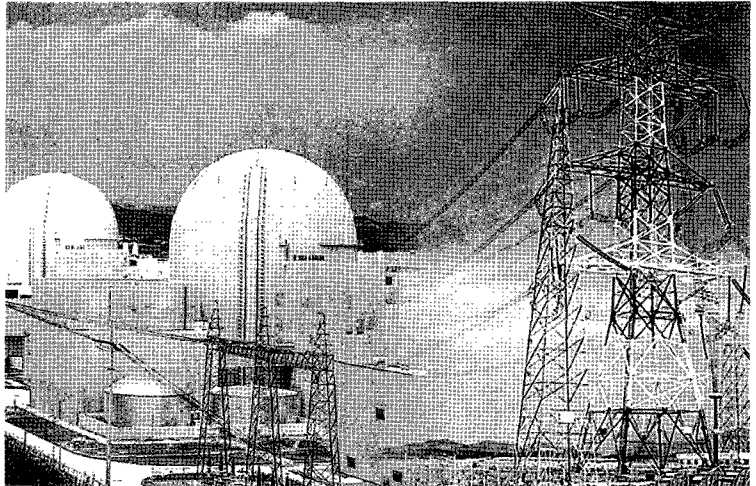
한 사설이다.

프랑스는 핵실험금지협정(CTBT)이 체결되기 전에 모든 핵실험을 다 해놓겠다는 의도로 계속해서 핵실험을 실시한다. 사설은 비핵보유국은 핵무기 개발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고 핵보유국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월 29일). 핵강국들의 무절제한 핵실험이 실시된 이후에 포괄핵실험금지조약에 관한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사설은 핵강대국들에 의한 영원한 핵독점이라는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9월 13일).

나머지 3개의 사설은 영광 원전 건설을 위해 건축 허가를 내주었던 영광군이 이를 취소해서 귀추가 주목된다며(2월 2일) 영광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2차 냉각수의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가동을 멈추는(8월 10일) 등 핵공포가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의 해답을 핵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 개발로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5월 29일).

• 1997년 •

1997년은 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다. 2개의 사설은 대만 핵폐기물을 다루고 1개의 사설은 원전 안전, 2개의 사설은 경수로를 주



국민들이 원자력에 관한 균형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일에 주요 일간지 사설의 역할은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같다. 현대 사회가 에너지 안보없는 불가능하고, 원자력의 도움없는 불가능하다. 교육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 대학, 시민 대학, 평생 교육으로 이어지겠지만 일간지는 매일 매일 이 나라 시민들이 읽고 있는 필독서가 되고 있다.

제로 하고 있다.

대만은 저준위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옮겨 처리하기로 북한과 비밀계약을 맺는다. 사설은 대만의 비신사적 행위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혹독한 식량난에서 내린 북한의 결정인 만큼 북한 동포의 식량난에 무관심했던 우리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1월 18일, 1월 30일).

1개의 사설은 지진 영향권에 있는 세 곳의 경상분지 원전 단지에 정부가 또 다른 원전 개발을 계획한 것을 두고 원전의 위험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잡은 원자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줄 위험한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다(7월 5일).

같은 해에 경수로의 기초 공사가 착공된다. 사설은 경수로 착공을 남북이 화해·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평가하면서(8월 19일) 분단의 세월이 긴 만큼 경수로 건설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0월 6일).

• 1998년 •

1998년에는 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온다. 3개는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2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다루고 있다.





1998년도는 본격적인 경수로 건설이 시작되면서 KEDO국간의 신경전이 벌어진다. 당초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각 국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다, 추가 부담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났다고 분석하고 미국 의회의 대북 지원 예산 삭감의 조치로(9월 22일) 한국에 대해 경수로의 추가 비용을 떠넘기려는 미국을 비난한다(5월 6일). 남북 문제는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는 이중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세밀히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8월 31일).

인도는 세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이 핵강대국에게만 유리한 차별적인 제도이기 이를 시정하고 핵무기 감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분하에서 그들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겨레는 인도의 행동이 핵확산 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짓이라고 논평하고 있다(5월 13일).

파키스탄도 인도의 핵실험에 대한 정당 방위라는 논리로 핵실험을 강행한다. 중동 지역의 핵무기 개발은 NPT와 CTBT 등의 기존 핵무기 억제체들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핵무기 추방을 위한 원천적 대책은 핵강국의 적극적인 노력, 즉 핵실험의 전면 금

지와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의 폐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사설은 주장하고 있다(5월 30일).

• 1999년 •

1999년에는 12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북핵 관련 사설은 3개이다. 미국의 CTBT 거부(1개)와 일본의 핵정책(2개)과 일본의 원전 사고(1개), 국내의 원전 사고(3개) 관련 사설과 원자력 기술(1개)에 대한 사설이 나온다.

북한은 금창리 지하 시설에 대한 핵의혹을 증폭시켜 북-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는 대신 핵의혹 현장에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자국의 식량난을 모험적 군사 행동으로 극복하려 한다. 사설은 금창리 지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고 미사일 문제도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되길 희망한다(3월 18일, 5월 29일, 6월 25일).

북한의 핵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미국의 공화당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반대한다. 핵확산 방지라는 인류의 대의를 당리당략의 재물로 삼고 있는 공화당의 태도를 지탄하고 있다(10월 9일).

일본의 핵정책과 관련해서 2개의 사설은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은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계가 재앙에 휩쓸릴 수 있다며 한반도와 지구 환경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안전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월 21일). 또한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핵 3원칙을 지키려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10월 21일).

일본의 위험한 핵정책을 경고하는 핵사고가 발생한다. 도카이무라의 핵연료 가공회사 제이시오(JCO)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설은 우리의 원전 정책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중인 차세대 원전 개발 등의 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10월 2일).

어느 때보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을 때(4월 1일) 월성 원전에서 중수가 새어 나와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며 한치의 오차 없이 안전 수칙을 엄수하도록 원전 운전 체계를 바로 잡는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0월 7일).

짚은 원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는 원전 사고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사설은 종합 점검 결과가 국민의 불안

과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며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하게 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원전을 투명하게 종합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11월 8일).

원전에서 나오는 온수가 주변 바다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온배수와 어종 및 어획량 감소의 상관 관계가 확인될 경우, 피해 보상뿐 아니라 사전 예방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8월 27일).

1999년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플라즈마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9월 21일).

• 2000년 •

2000년에는 원자력 관련 사설이 하나도 없다.

• 2001년 •

2001년에는 3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는 북핵 관련 사설이고 1개는 대만의 핵 폐기물에 관한 사설이다.

1997년 대만은 핵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식량난 해결을 유인책으로 북한과 비밀 계약을 맺었다. 4년이 지난 북한은 핵폐기물 저장소를 완공했고 대만이 핵폐기물 수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사설은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한다는 국제 사회의 원칙을 무시하려는 대만에 경고함과 동시에 사태 진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태도를 지탄한다(2월 19일).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로 정권이 바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빨리 재개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하면서 정부 또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6월 19일, 7월 28일).

• 2002년 •

2002년에는 31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미국과 일본, 중동 지역의 핵과 관련된 3개의 사설을 제외한 28개의 사설이 북핵 관련 사설이다.

미 특사의 방북 이후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함께 또다시 한반도는 핵 긴장에 휩싸인다. 북핵 문제로 인해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1994년도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2002년 봄에 미국은 불량 국가의 핵무기 개발 억제 목표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발표한 다. 또한 미국은 필요하면 북한에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한다. 사설은 미국에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묻고 있으며 '핵태세 검토'를 당장 거둬들여야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3월 12일, 3월 16일).

인도와 파키스탄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통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국제 사회는 두 나라 지도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카슈미르 분쟁의 항구적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사설은 논평하고 있다(6월 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일본도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발언한다. 이를 두고 사설은 아시아와 온 세계를 향한 일본의 우경화를 주변국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6월 2일).

9월 16일에 있었던 미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국 국방 장관의 '북한 핵무기 보유' 발언을 시작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핵위기속으로 들어간다. 사설은 미 국방 장관의 발언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지만(9월 19일) 북한은 미 특사의 방북 이후에 스스로 핵개발을 시인하다(10월 18일). 사설은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10월 21일) 미국은 당장 전쟁에 들어가야 한다는 초강경론을 제기하며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



결하려 한다(10월 19일).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주도적인 구실을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중재자 몫을 넘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하며 위기일수록 대화 통로를 넓혀주는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또한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있다면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순서라고 제안하고 있다(10월 26일, 11월 11일).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북한 핵문제를 집중 논의하고(10월 28일) 북-일 수교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10월 29일)과 달리 미국 공화당 정권은 북한의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내정 간섭적인 것이며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11월 9일, 11월 14일).

미국은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스커드 미사일을 신고 가던 북한 배를 나포한다(12월 12일). 외교적 경제적 대북 봉쇄 정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 하지 않은 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12월 18일, 12월 25일, 12월 31일) 북한은 핵동결 조치 해제 등의 발언과 핵연료봉 저장 시설에 손을 대면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편다(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24일).

북한 핵 문제는 갈수록 긴장과 위기가 높아지고 유엔 안보리로 핵문제는 넘어가게 된다(12월 30일). 사설은 북한과 미국이 모두 기본 합의 체제의 위기에 책임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경수로 건설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11월 16일, 12월 17일) 미국과 북한의 우연한 외교 전략을 촉구하고 있다(11월 19일, 12월 23일, 12월 27일).

### 매일경제

#### • 1990년 •

1990년에 2개의 원자력 시설이 나왔는데 냉전 체제 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는 G7 회담에서 북한이 핵 안전 협정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며 남·북한 회담을 환영한 것을 기록하며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 환경 문제를 논의하며(7월 12일, 「G7 회담과 세계신질서」), 중동 전쟁에 따른 우리 나라의 에너지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8월 3일, 「에너지 대책을 서둘러라」).

#### • 1991년 •

1991년에는 4개의 원자력 시설이 나왔는데 3개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북-미 관계 개선, 남북의 화해 무드에 따른 희망과 기대, 경제 교류가 논의되고 있다(7월 1일, 「미국에 전할 우리의 주장」; 11월 8일, 「한반도 비핵을 위한 결단」; 12월 16일, 「한반도 비핵을 위한 결단」).

1개가 영광 원전 2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고장을 논평하며 위험한 전력 예비율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기적 전원 개발 사업을 제안하며 발전소 건설에 민자 유치를 또한 제안하고 있다(7월 6일, 「전기 사정 매우 불안하다」).

#### • 1992년 •

1992년에는 3개의 원자력 시설이 나왔는데 핵 폐기물 처분장을 찾는 일(1월 23일, 「핵 폐기장 반대만 할 수 없다」),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정책(7월 31일, 「전력난과 원전의 장단점」),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8월 26일, 「과학 기술 투자의 정도는?」)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이며, 거기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해야 하며 원자력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정부와 민간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1993년 •

1993년에는 8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3개의 북한의 핵(3월 17일, 「전쟁발발설과 우리의 대응」; 11월 3일, 「북한은 더 이상 오판(誤判) 말라」; 12월 25일, 「주목되는 북핵(北核)협상 새 국면」)이 큰 관심사로 등장하며, 에너지 정책(2월 19일, 「작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관리공단의 노사 분규(11월 6일, 「불쌍 사나운 공공기관 노사」), 동해에 버려지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핵 폐기물(5월 14일, 「공해 침입 대응 전략을 세우라」; 10월 27일, 「동해에 핵 폐기물 일본(日本) 차지」)과 중국의 지하핵 실험이 주는 충격을 논의하고 있다(10월 13일, 「한-중 경협 의의 새 변수」).

북한의 돌연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전쟁불사론이 가져오는 한반도 긴장, UN과 IAEA의 북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닫혀있는 사회로부터 열린 사회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해가 러시아·일본의 핵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에 개탄하며 해양 환경 오염이 지구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남·북한, 일본, 러시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정부 개편으로 동자부가 폐지되어 상공부가 에너지 정책의 책임을 지게 되며, 에너지

정책은 ① 에너지 자원 확보, ②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③ 환경 대응, ④ 기술 개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지하 핵실험은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평가절하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중국·한국의 경제 관계로 해독하고 있다.

• 1995년 •

1994년은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긴장의 해였다. 22개의 원자력 사설 가운데 19개가 북한의 핵과 관련되어 있는 글들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끌려 다녀서는 안되며, IAEA의 핵사찰이 철저해야 하며 한국과 미국의 공조, 북미(北美) 회담의 성공 기대, 한국·중국·일본의 공조 협력, 남북 경제 협력의 불안감, 한국과 러시아의 공조, 군사적 준비 강화, 효과적인 경제 제재, 북한의 실천 의지 의문들을 담고 있다(1월 21일, 「주목되는 핵사찰 양보 불가」; 2월 17일, 「북한 핵사찰 수용 이후」; 3월 22일, 「북한, 어디까지 가려는가?」; 3월 23일, 「한-일-중 공조 협력의 계기」; 3월 29일, 「동북아 3각 협력의 새 지평」; 4월 1일, 「중심 잃은 북핵(北核) 정책」; 5월 10일, 「남북 경제 협력 신중해야」; 6월 4일, 「대북 정상 회담의 큰 성과」; 6월

7일, 「대북 제재와 경제 안정」; 6월 8일, 「효과적인 대북 경제 제재」; 7월 1일, 「너무 성급한 남북 경협 기대」; 7월 6일, 「평양 회담에 혼수 너무 많다」; 7월 22일, 「베일 벗는 김정일 체제」; 8월 16일, 「북핵, 지금부터 시작이다」; 8월 24일, 「한-중 경제 협력 증진과 과제」; 10월 19일, 「북한의 실천 의지에 달렸다」; 10월 20일, 「남북 경협 조건과 순서」; 11월 12일, 「북한의 경협 반응과 대응」; 12월 13일, 「미-북 관계와 남북 경협」).

환경에 관련된 사설은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에 관한 두 개의 글인데 3월 23일 협약이 발효되면서 쓰여졌고(3월 23일, 「환경 장벽, 돌파 아쉽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모두가 환경 공로자가 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의 사설은 에너지 과소비, 원전의 가능성, 원전의 사고를 논의하고 있다(6월 4일, 「모두가 환경 공로자 되자」).

핵 폐기물에 관련된 사설은 굴업도가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이기주의 경계, 폐기물 해상 운송 안전 고려를 논의하고 있다(12월 23일, 「어렵게 결정된 핵 폐기장」).

• 1995년 •

1995년에는 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다. 4개의 사설이 제네바 협정 이후 기대되는 북-미 관계 개선, 남북한 관계 개선을 담고 있



다. 북-미간에 올 경제 교류, 한국형 경수로, KEDO, 남북 경협을 기대 속에서 전망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방과 세계 사회에로의 진입을 반반 기대하고 있다(1월 18일,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1월 22일, 「미-북 관계의 새 지평」; 3월 11일, 「남북 관계의 긍정적 시각」; 6월 14일, 「경수로 회담의 타결」).

하나의 사설은 고리 원전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의 은폐 의혹을 논의하고 있다(7월 24일, 「원전 안전 점검 철저하게」).

• 2000년 •

1996년에 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에너지 정책에서의 원전의 중요성과 원전 고장에 대한 논평, 원전 고장으로 인한 전력 공급의 차질 우려, 지역 주민 저항으로 인한 지방 자치 단체의 원전 건축 허가 취소를 비판하고 있다(2월 2일, 「원전 건축 허가 취소」; 6월 7일, 「21세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 8월 13일, 「아슬아슬한 전력 시장」; 8월 15일, 「원전 고장에 대한 반응」; 9월 13일, 「표류하는 영광 원전」).

원자력의 힘이 위대한 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서술하며 철저한 안전 대비는 필요하지만 과민 반응은 해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 1997년 •

1997년에는 2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대만의 핵 쓰레기가 북한 황해도로 가는 것을 성토했는 사설(1월 24일, 「핵 쓰레기 강력 대응해야」)과 북한의 경수로 착공 이후 한국이 담당하는 재정적 부담을 논의하고 있으며 52억 달러 투입의 경험 사업이 성공하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8월 20일, 「경수로 착공 이후의 과제」).

• 1999년 •

1999년에 2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논평하고 있고(1월 5일, 「햇볕 정책 유일한 대안」) 월성 원전의 중수 누출 및 이로 인한 작업자의 피폭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원전도 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 아일랜드 같은 원전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한전/과기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사고를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월 6일, 「우리도 원전사고 예외는 아니다」).

• 2002년 •

2002년에는 9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게재되었다. 9개의 사설이 모두 북한의 핵에 관련된 것이며 북한이 제네바 협약을 깨고 비밀리에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을 포착한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북-

미간 긴장 고조가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은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다시 IAEA의 사찰을 받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은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10월 17일, 「햇볕의 합이 핵개발인가?」; 10월 21일, 「북핵,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을」; 10월 23일, 「북핵 사태, 초당 협력 지속을」; 10월 27일, 「북은 핵 포기 선언부터 하라」; 11월 7일, 「경제 회복과 대화 외교를 바란다」; 12월 12일, 「북, 또 벼랑 끝 전술인가?」; 12월 13일, 「북핵 해결에 국제 공조 절실」; 12월 24일, 「북핵 해결에 전방위 외교를」; 12월 29일, 북, 벼랑 끝 핵 전략 안 통한다」).

1994년과 2002년에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긴장 상황을 논평하는 사설들이 29개 게재되었고, 12년 조사 기간에 41개가 게재되었다. 에너지 정책과 전력 사정에 관한 사설이 7개 게재되었고,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사설이 7개 게재되었다. 핵폐기물 사설들은 동해에 핵폐기물을 버리는 러시아·일본, 북한에 버리려는 대만이 나온다. 원전의 사고 안전 운영에 관한 사설이 5개 게재되었고 지구 온난화와 원자력 사설이 3개, 중국의 핵 실험을

<표 1> 연도·신문 교차표

		신문				전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연	1990 빈도	7	7	8	2	24
	신문의 %	3.3%	2.4%	2.9%	3.2%	2.9%
	1991 빈도	33	26	37	4	100
	신문의 %	15.7%	8.9%	13.5%	6.5%	11.9%
	1992 빈도	24	21	32	3	80
	신문의 %	11.4%	7.2%	11.6%	4.8%	9.5%
	1993 빈도	19	41	47	8	115
	신문의 %	9.0%	14.1%	17.1%	12.9%	13.7%
	1994 빈도	31	78	61	22	192
	신문의 %	14.8%	26.8%	22.2%	35.5%	22.9%
	1995 빈도	19	26	30	5	80
	신문의 %	9.0%	8.9%	10.9%	8.1%	9.5%
	1996 빈도	8	7	5	5	25
	신문의 %	3.8%	2.4%	1.8%	8.1%	3.0%
	1997 빈도	12	16	5	2	35
	신문의 %	5.7%	5.5%	1.8%	3.2%	4.2%
	1998 빈도	15	16	5		36
	신문의 %	7.1%	5.5%	1.8%		4.3%
	1999 빈도	12	11	12	2	37
	신문의 %	5.7%	3.8%	4.4%	3.2%	4.4%
2000 빈도		3			3	
신문의 %		1.0%			.4%	
2001 빈도	3	5	3		11	
신문의 %	1.4%	1.7%	1.1%		1.3%	
2002 빈도	27	34	30	9	100	
신문의 %	12.9%	11.7%	10.9%	14.5%	11.9%	
전체	빈도	210	291	275	62	838
	신문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논평한 사설이 1개, 원자력 연구·개발에 관한 사설이 1개로 집계되었다.

1994년과 2002년의 북핵 위기를 제외하면 에너지 정책, 원전의 안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매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신문으로 원자력에 관한 사설 가운데 북한의 핵에 절대 다수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북한의 핵에 관한 사설 속에는 남

북의 경제 협력, 한국·미국·일본의 공조, 중국의 카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 들어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전에는 북한의 핵이 투명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남·북 경제 협력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던가, 선·후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북한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이 알려진 후에는 체제 변화가 경제의 선행 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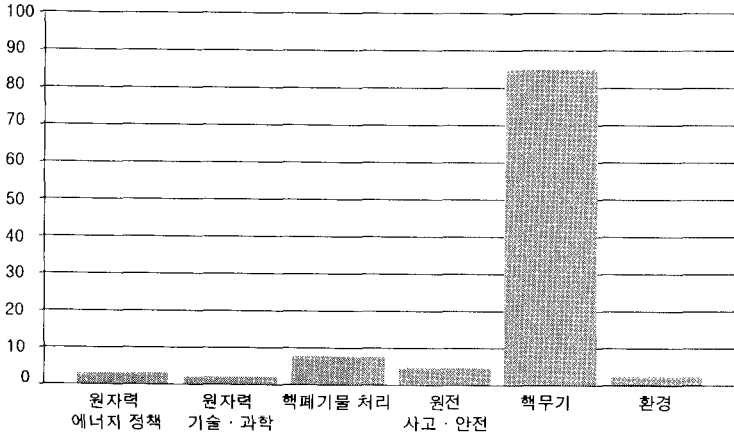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의존해야 할 에너지원(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5년 한국에 지방 자치가 들어오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광군이 영광 원전 5호, 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이 후일 위법으로 판결되었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설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굴업도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나온 것을 환영하는 사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일 정부 스스로 단층 발견으로 포기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설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지구 온난화를 다룬 환경 사설 속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표 2〉 연도 · 주제 · 신문 교차표

신문	연도	주제						전체
		원자력 에너지 정책	원자력 기술 · 과학	폐기물 처리	원전 사고 안전	핵무기	환경	
조선일보	1990	1		3		2	1	7
	1991		1	3	1	27	1	33
	1992	1				23		24
	1993		1		2	16		19
	1994		1	2		28		31
	1995				1	18		19
	1996	1			1	6		8
	1997			6	2	4		12
	1998	1				13	1	15
	1999	1				8		12
	2001				1	2		3
	2002					27		27
전체		5	3	14	11	174	3	210
중앙일보	1990	1		2		2	2	7
	1991		1			25		26
	1992			1		20		21
	1993			5		36		41
	1994			6		72		78
	1995		1	2	1	22		26
	1996	1				6		7
	1997			5	1	10		16
	1998				1	14	1	16
	1999				2	9		11
	2000					3		3
	2001			1		4		5
	2002					34		34
전체		2	2	22	5	257	3	291
한겨레	1990			2		6		8
	1991	1		2	2	31	1	37
	1992	1		2		29		32
	1993	1		3	1	42		47
	1994	1		3		56	1	61
	1995	1	1	3	2	23		30
	1996	2			1	2		5
	1997	1		2	2			5
	1998					5		5
	1999		1		4	6	1	12
	2001			1		2		3
	2002					30		30
	전체		8	2	18	12	232	3
매일경제	1990	1				1		2
	1991				1	3		4
	1992			1	1	1		3
	1993			2	1	5		8
	1994			1		19	2	22
	1995				1	4		5
	1996	4			1			5
	1997			1		1		2
	1999				1	1		2
	2002					9		9
	전체		5		5	6	44	2



〈그림 1〉 주제별 빈도 퍼센트

〈표 3〉 주제·신문 교차표

		신문				전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주 제	원자력 에너지 정책	빈도	5	2	8	5	20
		신문의 %	2.4%	.7%	2.9%	8.1%	2.4%
	원자력 기술·과학	빈도	3	2	2		7
		신문의 %	1.4%	.7%	.7%		.8%
	핵폐기물 처리	빈도	14	22	18	5	59
		신문의 %	6.7%	7.6%	6.5%	8.1%	7.0%
	원전 사고·안전	빈도	11	5	12	6	34
		신문의 %	5.2%	1.7%	4.4%	9.7%	4.1%
	핵무기	빈도	174	257	232	44	707
		%	82.9%	88.3%	84.4%	71.0%	84.4%
환경	빈도	3	3	3	2	11	
	신문의 %	1.4%	1.0%	1.1%	3.2%	1.3%	
전체	빈도	210	291	275	62	838	
	신문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있다.

**결론**

1990년~2002년 사이 우리 나라

주요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원자력은 절대적으로 북한의 핵에 관한 것이다. 1994년과 2002년은 '북한의 핵 위기'에 더욱더 많은 양의 사설이 나왔다. (〈표 1〉, 〈표 2〉 참고).

조선·중앙·매경은 보수적인 음성을, 한겨레는 '진보적'인 음성을 내고 있다.

한겨레는 북한의 식량난도 남한이 돕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논평하고 미국의 북한 압박이 북한의 핵문제를 가져왔다고 친북한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는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미군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를 거듭 촉구한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핵이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 노력 없이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난한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겨레는 대체 에너지 개발과 공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원자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기를 들던 모습보다는 점차 유화적인 논평을 낸다.

조선일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미군의 한반도 핵무기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사설은 전력 생산에 대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원자력을 인정한다. 특히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전력 생산을 위한 '핵재처리'마저 포기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에너지 산업을 위한 핵



〈표 4〉 핵무기 소주제 · 신문 교차표

		신문				전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소 주 제	북한 핵무기	빈도	150	230	207	43	630
		신문의 %	86.2%	89.8%	89.2%	97.7%	89.2%
	탈냉전 핵군축	빈도	12	11	10		33
		신문의 %	6.9%	4.3%	4.3%		4.7%
	프랑스의 핵실험	빈도	2	4	1		7
		신문의 %	1.1%	1.6%	.4%		1.0%
	중국의 핵실험	빈도	1	3	4	1	9
		신문의 %	.6%	1.2%	1.7%	2.3%	1.3%
	일본의 핵정책	빈도	7	3	7		17
		%	4.0%	1.2%	3.0%		2.4%
	환경	빈도	2	5	3		10
		신문의 %	1.1%	2.0%	1.3%		1.4%
	전체	빈도	174	256	232	44	706
		신문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재처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신문이 공유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는 정부는 정부의 노력과 주민의 저항이 네 신문의 사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수적인 신문 사실들은 주민 저항도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원자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일보는 정부의 밀실 행정과 지역 주민의 넘비 현상을 양비론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 결론적으로 원자력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을 명분화한다. 한겨레는 정부의 원전

정책, 밀실 행정이 주민의 저항을 가져온 것이라고 인과 관계를 논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사실들은 일본의 원자력 산업이 가질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경계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핵보유국의 핵 해체와 핵국가들의 비핵산화 조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 회담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중국의 핵실험, 불란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비판적인 논평을 하고 있다. (〈표 4〉 참고).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사실에 나타난 원자력은 원자력 산업에는 지극히 제한된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

며 핵무기와 관련된 '북한핵'에 지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림 1〉, 〈표 3〉, 〈표 4〉 참고).

그것은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신문의 성격상 안보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핵의학에 너무 소홀한 감을 주고 있다. 북한의 핵이 원자력을 원자탄으로 착각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원자력에 관한 균형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일에 주요 일간지 사실의 역할은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같다. 현대 사회가 에너지 안보없는 불가능하고, 원자력의 도움없는 불가능하다. 교육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 대학, 시민 대학, 평생 교육으로 이어지겠지만 일간지는 매일 매일 이 나라 시민들이 읽고 있는 필독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간지 사실을 쓰는 논설위원들의 원자력에 관한 균형된 지성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읽어야 할, 알아야 할 원자력을 써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원자력학회, 환경정책학회, 원자력산업협회, 원자력문화재단, 언론재단 등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